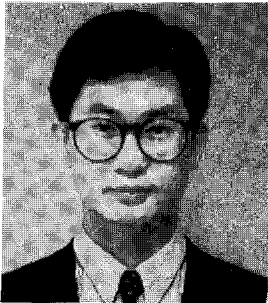


우루과이라운드와 설비산업



글/김홍수(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건설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서비스의 교역자유화를 취지로 출범된 UR 서비스협상이 금년말을 시한으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협상은 세가지 과업을 안고 시작되었다. GATT와 같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제정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분야별 주석서 제정과 실질적인 시장개방의 일정이 확정될 분야별 양허협상의 타결이다. 일반협정은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일부 분야의 주석서와 함께 금년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건설분야에 세차례의 회의가 열려 건설 및 엔지니어링 교역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거론되었다. 한국은 여러 공식, 비공식문서를 제출하며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선진국은 건설시장 개방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극적이었고, 개도국은 인력이동에만 관심을 표명하였으므로 한국의 주석서 작성을 위한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건설분야 양허협상은 서비스 일반협정에 근거하여 내년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이 건설분야협상에서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쌍무적으로 진행될 양허협상에서 선진국의 일반협정에 관한 자

의적인 해석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주석서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을 담자는 의도가 있었고, 둘째는 건설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항을 널리 공지시켜 양허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며 셋째는 우리 건설업이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금융, 통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건설시장의 세계적인 개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한국 건설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우리 건설업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건설업계는 해외 및 국내에서 심각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없이 어차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쳐 한국 건설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것이다.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한국 건설업이 성숙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면 개방이라는 외부압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건설업 발전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개방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개방으로 유도

해야 할 것이다.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비업은 UR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설비는 그 자체의 교역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특히 건설서비스의 교역에 수반되어 거래될 수 있으므로 UR의 상품협상그룹(GNG), 서비스협상그룹(GNS) 모두와 관계가 있다.

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UR/GNG의 노력에 따라 설비의 상품으로서의 교역은 종전보다 수월해질 것이고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품의 교역은 전통적인 교역형태로서 설비업계에 새로운 충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건설서비스의 교역자유화와 함께 허용될 기자재의 이동이 설비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GNS협상에서 건설서비스라 함은 엔지니어링 및 시공을 총칭하는 광의의 건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서비스의 교역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뿐만 아니라 외국 건설업체가 특정 건설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 집행하는 것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자본, 인력, 장비, 자재의 이동 및 일정한 기간 내에 수반되는 시공도 포함한다.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과거와 같이 해외건설과 함께 기자재의 해외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으나 현재는 외국의 건설업체와 설비업체의 동반진출로 인한 국내 설비시장의 잠식이 더 우려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외국의 설계 스펙에 따라 외국의 기자재가 대량 유입될 수 있으므로 취약한 우리 설비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설비시장도 자연스럽게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개방이 전면적으로 일시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협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진적 자유화 원칙에 따라 90년대 상반기에는 토목·건축업, 90년대 중반에는 특수·전문업종, 90년대 하반기에는 건축사업·감리전문업·건설기술용역

업이 개방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개방에 있어서도 우선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하고 점차 단독투자, 지사까지도 인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방일정은 내년초에 있을 국가간 양허협상에서 확정될 사안이나 개방의 순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보호방안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국내업체와 공동도급에 의하도록 하는 것과 일정부분 이상의 한국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무화,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건설산업 육성책으로는 기술개발투자와 비용에 대한 세액 감면 범위의 확대, 엔지니어링 진흥공단의 설립,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발주의 확대, 건설전문대학의 설립, 기술보상제도의 적극 시행, 외국업체의 기술이전 유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방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경쟁력 제고, 시장 다변화, 기술이전, 산업구조 합리화 등 개방의 긍정적 효과도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건설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낙후된 설비업계는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여건 조성과 함께 자체적인 기술개발의 노력에 경주하여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 정보화 시스템 설비, 인텔리전트건물 설비등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의 국제규격화, 외국 품질보증마크의 획득 등도 추진하여 넓어진 해외시장의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